

### Contents

- 01 권두언  
재난에 대한 중앙-지방의 효율적 대응 방안
- 03 이달의 논단  
-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한 로드맵  
- 일본의 지진재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07 자치단체 우수사례  
불의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원시
- 09 지방자치단체 동향
- 10 도시통계  
재난 안전 관련 통계 추이
- 15 연구원동정  
5월 연구원 소식

### KRILA\_2011

2011년 5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2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 재난에 대한 중앙-지방의 효율적 대응 방안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장

연초부터 홍수, 화산폭발, 폭설, 지진, 지진해일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 우리나라도 기록을 갱신하는 강추위와 폭설, 구제역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신모에다케 화산이 1월 26일 이후 총 13회에 걸쳐 분출하여 인명피해 등의 직접

피해와 항공편 결항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간접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뉴질랜드 크라이스터 처치에서는 2월 22일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여 사망 및 실종 364명, 부상 2,500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3월 17일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이에 동반된 지진해일은 현재까지도 피해규모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따른 2차 재난으로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 물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지만, 방사능 물질이 전국 곳곳에서 검출된 바 있으며, 언론 매체를 통하여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이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재난 발생규모의 대형화로 주변지역 및 인접국가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재난발생이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진과 지진에 따른 지진해일과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 이상이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그 파급효과도 비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화, 복합화, 비정형화되고 있는 재난의 특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기능과 역할분담이라는 새로운 체제정립을 통해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난대비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예방부터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이르는 일련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래 관에서 주도하던 재난대책 수립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유형의 재난과 재해에 대한 자주적인 의식과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저감 기술개발과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개발은 선진국형 재난관리의 필수요소이므로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능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달의 논단 \_ ①

#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한 로드맵



원종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전국적으로 과거 10년간 (2000~2009) 발생한 주요 재난의 연평균 피해액은 5천2백억원, 연평균 발생건수는 약28만건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인적재난에 비하여 그 발생횟수가 상당히 낮으나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자연재해 중에서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연평균 피해액은 1조3천억원/연평균 인명피해 124명, 2000~2008) 인적재난으로는 자동차 교통사고 및 화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교통사고 피해액은 1천4백억원/연평균 발생건수 23만건, 화재 연평균 피해액은 2천억원/연평균 발생건수 3만8천건).

서울에서는 연평균 약 4만9천건의 자연 및 인적재난이 발생하며, 이는 6만2천여명의 인명피해와 40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주요 재난은 교통사고, 화재, 풍수해 등이며, 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피해액은 풍수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으로 세 가지 발생 원인을 분류해 보았다. 첫째,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복잡화. 둘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위험 증가. 셋째, 건축기술 혁신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위험성 증가이다.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복잡화로 인한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은 (1)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태풍, 홍수, 가뭄, 설해, 황사, 지진 등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대규모 자연재난 증가) (2) 건축물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위험(건축물 등의 다양화, 지하심층화, 초고층화, 밀집화,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 (3) 테러위협 확대(국제 갈등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신중 위험물질을 사용한 대형테러 위협 확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위험 증가로 인한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은 일상적 사고 및 새로운 생활위험 요인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미흡(신에너지, 신소재, 신제품 사용증가 등 생활양태 변화)

건축기술 혁신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위험성 증가로 인한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안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미비(각종 재난에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최첨단 건축기술 개발과 도시기능이 하나로 연결되는 U-City 등 최첨단 도시유형의 등장)

방재환경의 변화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30년간의 자료 분석 결과 80mm/일 이상 집중호우 일수가 1977년에 비하여 2005년에 1.5배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방재관련 추진 사업들이 과거 자연재해 방재사업에 집중·투자되고 있었지



만, 앞으로는 사회적 재난 및 예방적 재해경감사업 부분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확대를 계획 및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재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장기계획의 수립, 반복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복구의 제도화, 방재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핵심과제의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대형 및 복합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확립. 둘째, 시민 생활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셋째, 도시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 넷째, 방재 총괄기획 기능의 강화이다.

새로운 형태의 대형 및 복합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 도시의 대형 및 복합재난 관리체계 확립(도시의 고층화 및 과밀화는 대형·복합 재난의 발생을 증가시킴. 따라서 초고층 대형건물, 대규모 지하상가 등의 대형 및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이 필요하며 (2)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건설(전 지구적 기상이변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 재난을 발생시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책 수립', '예방 방재사업 실시' 등의 전략과제 추진은 이러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이 시급하다.

시민 생활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재해약자 안전 환경 확보방안', '시민 자율방재 교육·훈련' 등의 생활안전 환경조성 강화대책이 필요)이 요구된다.

도시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 도시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교량, 터널, 도로 등의 안전성 확보는 다양한 인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킴.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안전도 강화' 등의 추진과제는 도시 시설물들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와 (2) 도시 취약지역의 구조개선(유류, 가스, 유해화학물질 등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 취약지역 등에 대한 구조개선을 위하여, '위험물 상시감시체계 확립', '사각지역 해소대책 수립' 등 전략과제)이 필요하다.

방재 총괄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방재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총괄·기획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 이달의 논단 \_ ②

# 일본의 지진재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에서 산리쿠 앞 바다(三陸沖)를 진원지로 매그니튜드 9를 기록한 사상 최대의 지진(동일본지진)이 발생하였다. 심각한 건물 흔들림과 최대 8.5미터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동북지방을 덮치면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수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최악의 경우 체르노빌 사태에 버금가는 심각한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4월 20일 현재, 사상자는 1만 4013명, 행방불명자는 1만3804명 등 총 2만 7817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비용은 최대 25조엔(3090억 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도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 성정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우선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위대, 시민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면서 구조 및 실종자 수색, 피해자의 생활지원(피해자 생활지원특별대책본부 설치)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복구하기 위한 부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동일본대지진부흥구상회의 개최), 최근 총 4조200억엔(53조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재해대책은 재해예방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의 3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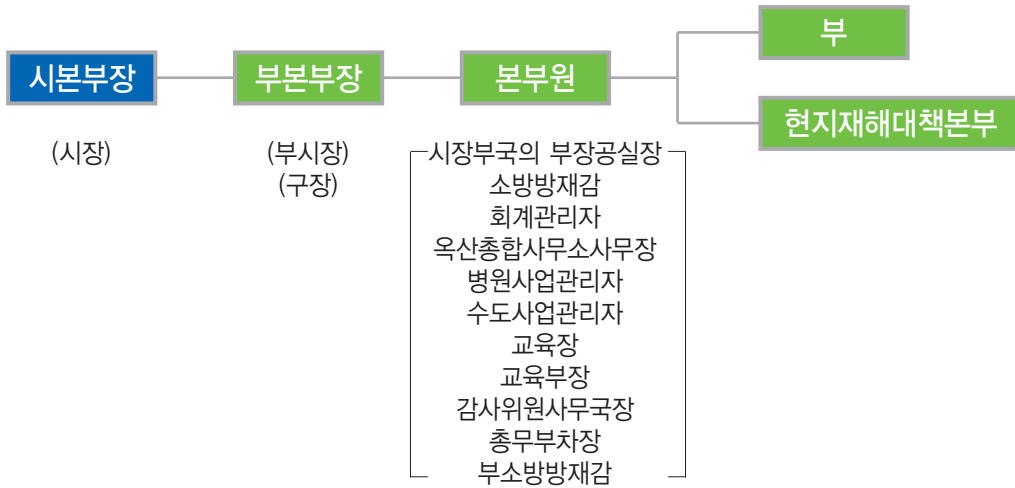
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방재기관들은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주민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초동대응은 재해응급단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체제와 방식으로 위기 발생 순간에 대응하는가? 동일본지진의 집중피해 지역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방재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방재활동을 조직화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조정기관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의 비상집회와 정보수집체제를 확립하고자 재해대책본부와 현지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설치 규모와 인력은 재해 등급(3등급: 경계, 1호비상, 2호비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호비상은 진도 6, 2호비상은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이며, 2호비상의 경우 전 공무원이 동원된다. 조직은 본부원회의, 部, 현지대책본부로 구성된다. 본부원회의에서는 종합적인 응급대책 방침을 결정하고 각 부별로 실시하는 대책을 상호조정하며 연락을 취한다.

둘째 지역방재회의는 활동계획 전반(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상위단체의 방재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대체로 재난발생을 전후로 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필요 항목과 방식이 기술되어 있다. 재해대책본부의 경우, 각 분장사무는 본부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각 부는 소관사무별로 상세한 활동 매뉴얼을 작성한다. 주요 활동사항들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다.<sup>1)</sup>

셋째 지역에는 다양한 공적 방재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이 정보공유와 연락망 구축, 협조방식을 통해 주도적으로 위기극복활동을 수행한다. 모리오카시의 경우, 모리오카시(기초지자체), 일부사무조합(소방본부), 이와테현(광역

주1) 정보연락활동, 본부원회의의 개최, 재해홍보, 피난 및 구출대책, 자위대 재해파견요청, 광역지자체 등에의 지원요청, 자원봉사활동대책, 재해구조원 적용대책,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설치, 기동력 및 수송력의 확보대책, 의료 및 보건대책, 급수대책, 식료 등의 응급대책, 생활필수품의 응급대책, 방역대책, 응급시 교육대책, 농림수산의 응급대패, 토목응급대책, 피해자 문병대책, 피해자의 생활확보 대책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화재대책본부 조직도〉  
(출처: 모리오카 지역방재계획)

지지체), 자위대, 지정지방행정기관(지방기상대, 산림관리서, 지역 재무사무소 등), 지정공공기관(일본적십자 지부, 동북 전력 지점 등)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지역언론사), 공공적 단체 및 방재 중요시설 관리자(농협, 상공회의소, 위험물 관계 시설 관리자 등)가 존재한다. 일부사무조합은 모리오카지구의 광역적 소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지역방재계획 속에 활동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소방은 소방청, 소방본부(상비체제), 소방단(비상시체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청은 총무성 산하로 국가의 소방·방재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전국의 소방기관들이 전략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체제를 확립한다. 소방본부는 기초자치체의 소방전문 조직부서로 소방국, 안전관리국, 소방방재국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소방청은 소방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권이 없으며 조언이나 지도, 조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소방관련 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것이다. 소방본부·소방단은 일상적으로 관련 장비를 개량하거나 훈련을 실시하며 내진성이 낮은 건물, 구조물 조사와 보수, 지진재해 위험장소 등을 조사하며 정보공개 및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차 피난장소, 광역피난장소, 피난소 등을 결정하며 방재창고 등을 설치한다.

아직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행정기관의 대응력 부족과 리더십

의 결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부족 등이 비판받고 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와타나베 시장은 대피지역의 누락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중앙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재난상황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향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방재기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대응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실시될 것이며, 이 교훈은 기존 방재체계의 모습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재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방재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초동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대응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의문이 따른다. 일본 지진사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재해대응체계의 구성과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다양한 유형의 재해를 상정한 대응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충실한가? 훈련과 교육이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체계가 정비되어 있는가? 중앙정부를 비롯한 외부와의 지원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가? 등등. 이번 동일본 대지진은 재난 시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동시에 현재의 역량을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자치단체 우수사례

# 불의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원시



이흥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수원시장은 2011년도 신년사를 통하여 “행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의 안전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WHO로부터 인증 받은 국제안전도시답게, 시민들이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ONE-STOP 재난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민생활의 안전과 재난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새해 초부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제1부시장이 대형공사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절토사면 및 가시설물 관리 철저 붕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선제적 안전대책 강구 및 유사시에 신속한 조치 기능토록 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형공사장의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공사장 전체적인 안전관리실태와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노후위험 축대 및 옹벽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 결과, 대형재난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대형공사장에서는 지하터파기 공사장 흠막이 가시설 배면부 배수로 정비 미흡으로 해빙기, 호우 시 우수침투에 따른 토압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배수로는 상시 배수기능이 확보토록 정비 및 흠막이 배면부에 대한 지속적



오리~수원 복선전철(4공구) 안전점검



오리~수원 복선전철(4공구) 안전점검



망포동 도서관 안전점검



삼성로 확장공사 안전점검

인 계측관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공사장내 근로자 안전체험장 설치로 안전의식고취 및 사각지대 차량 반사경, 표지판, 경광등 설치로 차량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철저한 사전대비 추진 및 현장중심의 점검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해대책에 관한 관련실과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 재해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방재팀 2명)을 운영하고, 비상시



공사장내 안전체험관 운영

수원시 30분 대피지역 주민대피기준 설정 및 주민대피 시스템 운영

지구명	위 치	대피장소	추진사항	비고
원천지구	영통구면내마을 일원	매원초교	안내판 설치완료	풍수해
평동지구	권선구서호천평리교 주변	고색초교	안내판 설치완료	풍수해

※ 수원시 30분대피 지정 현황

(Action Plan)” 마련하고 30분대피지역 설치 및 운영,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군부대, 민간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사장내 가설도로 반사경 설치

(정자동 SK SKY VIEW, 광고 A3BL 아파트신축공사)

에는 상황에 따라 2단계(준비·비상)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자를 편성하여 배치;하는 등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단계부터 한 발 빠른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상황실장, 관련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하여 실, 과, 소,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다섯째, 각종 재난관련 자료를 재난관련부서 담당자가 취합하여 입력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입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상황실 및 재난관련 부서 컴퓨터에 상시비치하고 있다. 여섯째, 태풍 및 호우에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사전대비를 위한 실행계획

일곱째,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담당자 부재시 예·경보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복수 지정)하고, 시설관리·점검 기록부 및 예·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비치하는 등 수원시의 실정에 맞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덟째, 최대 피해상황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원인력 및 장비수요 등을 판단하여 군부대(육군제2819부대4대대와 재난대비 지원 협약체결: 06.1.27), 민간단체(한국열관리시공협회수원지부와 효율적인 응급복구를 위한 협약체결: 06.9.28),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필요시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평상시 임무분담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해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비·인력 등의 부족에 대비하여 용인, 의왕, 안산, 화성 등 인접한 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

(자료제공 : 수원시 재난안전과 이필재)



# 지방자치단체 동향

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 청렴도 평가

-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의 개별 청렴도와 128개 모든 과의 부서별 청렴도를 측정하기로 함. 이를 위해 2011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10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함(2011.04.06)
-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서약 실시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2011.04.05)

## ▶ 국가비상사태, 주민대피시설

- 소방방재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총 사업비 718억을 투입하여 올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임(2011.04.08)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요령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화시킴. 국가 비상 위기 시, 국가와 지방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임(2011.04.20)

## ▶ 안전, 소통, 통합

-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맹형규 장관은 “안전한 대한민국, 따뜻한 사회”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언급(2011.4.15)



## 도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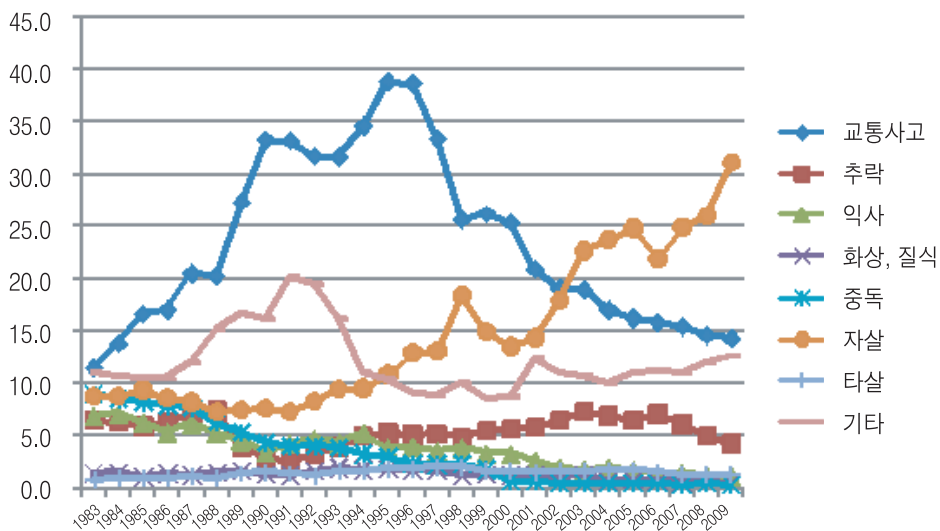
# 재난 안전 관련 통계 추이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 우리나라의 10대 사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교통사고, 호흡기 질환, 간 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남<sup>1)</sup>
-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외인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로 정의되며 2009년에는 65.8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음
- 외인 사망률은 자살(31.0명), 교통사고(14.4명), 추락사고(4.3명) 순으로 높음

- 1983년 이후 외인사망율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화하였음
- 교통사고 사망율은 1995년 38.7명(10만명당)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자살에 의한 사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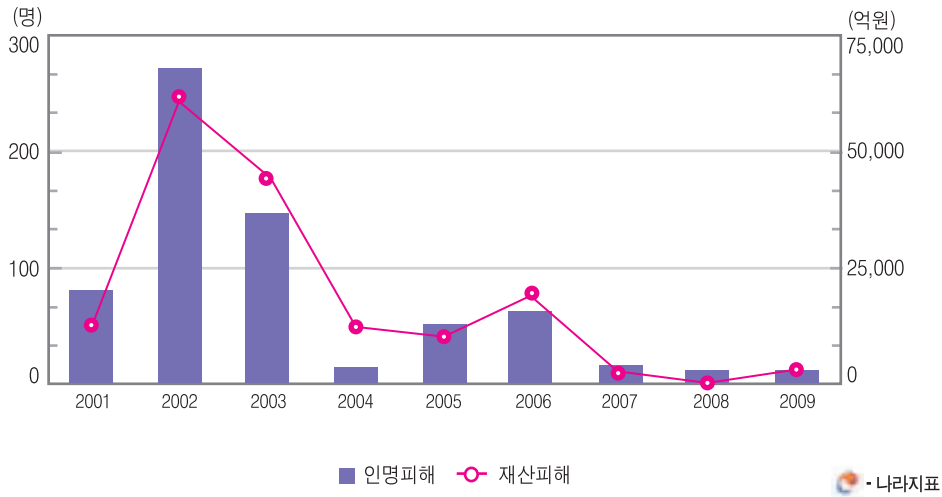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자연재난<sup>2)</sup> 발생 추이와 그 피해(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sup>3)</sup>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자연재난 중 최대의 피해를 준 것은 태풍 루사(02.8.31~9.1)로 246명이 사망했고 총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03년 태풍 매미의 경우, 각각 131명, 4조 2,225억원의 피해가 발생)

주1) 통계청, 2009년 사망원인통계

2)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함(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3) 소방방재청, 2009년 재난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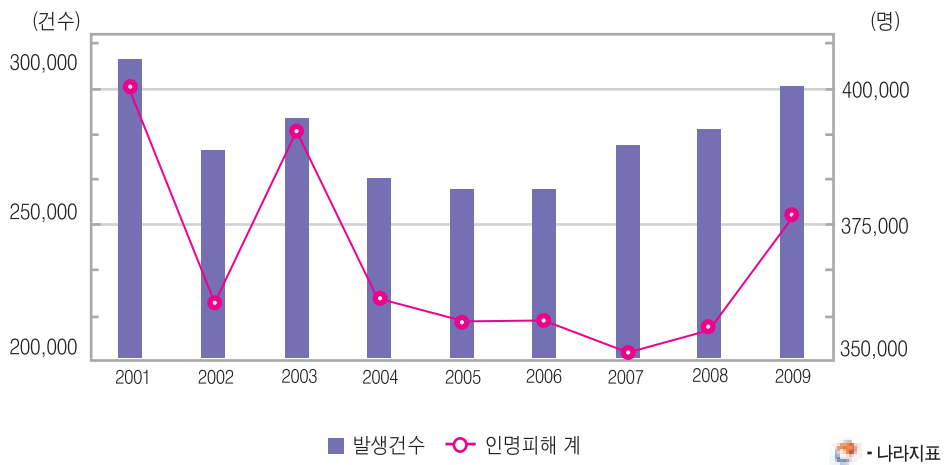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발생현황



○ 반면 인적재난<sup>4)</sup>은 최근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sup>5)</sup>

- 인적재난 중 가장 큰 부분은 교통사고로서 2009년의 경우 전체 인적재난 중 약 79.4%를 차지함

인적재난 발생현황



주 4) 인적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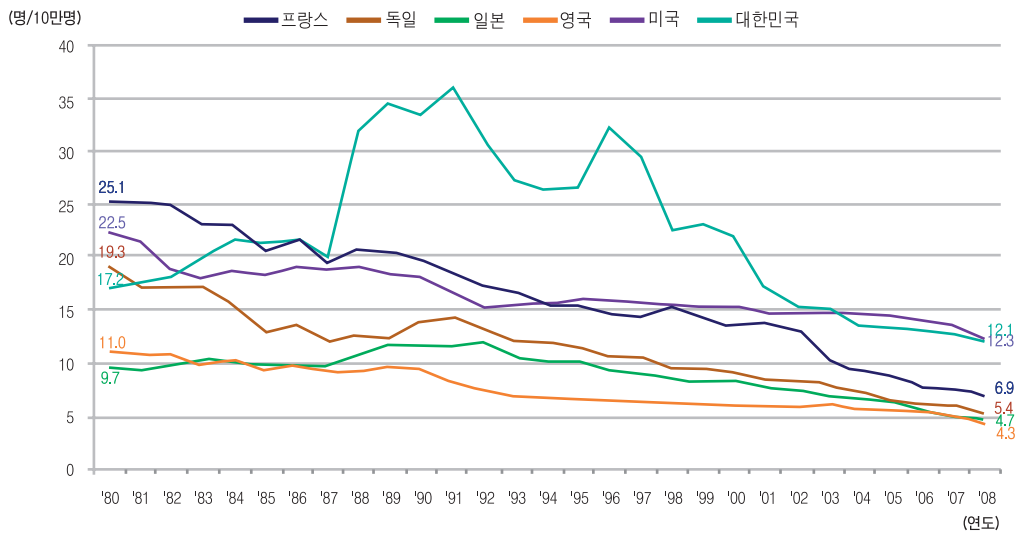
5) 소방방재청, 2009년 재난연감

표. 인적재난 발생현황 (소방방재청「재난연감」)

i i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269,704	280,869	260,659	257,278	256,992	272,090	277,303	292,287
도로교통사고 비율		85.7	85.7	84.7	83.2	83.2	77.8	77.8	79.4
인 명 피 해	계	360,526	391,969	361,177	357,332	357,552	351,657	355,832	376,835
	교통사고 비율	98.6	97.9	97.9	97.6	96.9	97.3	96.9	97.6
	사망	8,891	9,167	8,352	8,294	8,008	7,849	7,414	7,257
	부상	351,635	382,670	352,825	349,038	349,544	343,808	348,418	369,587

○ 교통사고 사망률

- 인적재난 및 외인사망률에 있어 자살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임.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을 국제비교하면 다음과 같음<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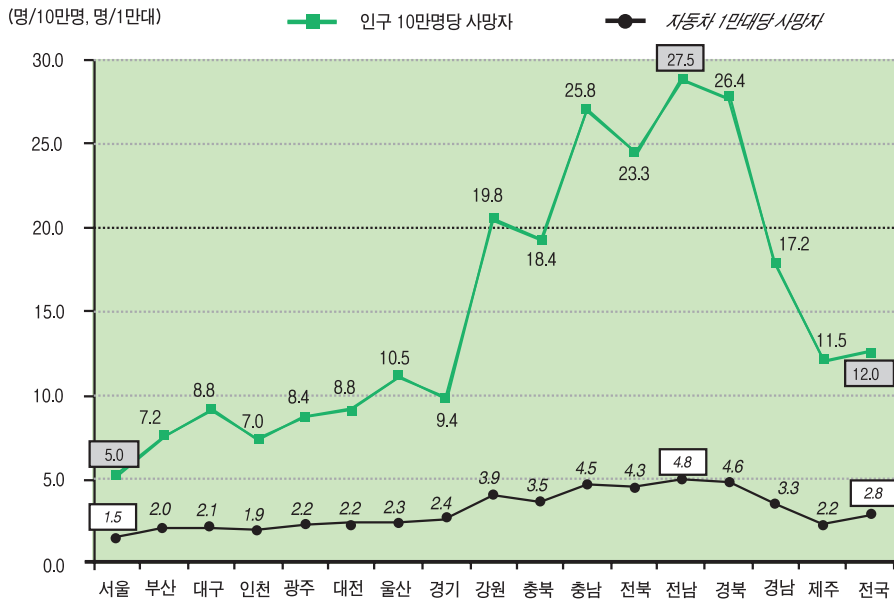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8년 12.1명으로 통계가 마련된 OECD 31개국 중 4위임(우리나라보다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미국, 폴란드, 그리스임)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인 8.2명에 비하여 1.5배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심각한 수준임

○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률

- 2009년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지역별 사망자수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sup>7)</sup>.
- 지역별로 비교할 때 전남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27.5명에 달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5명으로 가장 낮았음(전국 평균은 12명)

주 6) 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 교통사고비교, 2010  
 7)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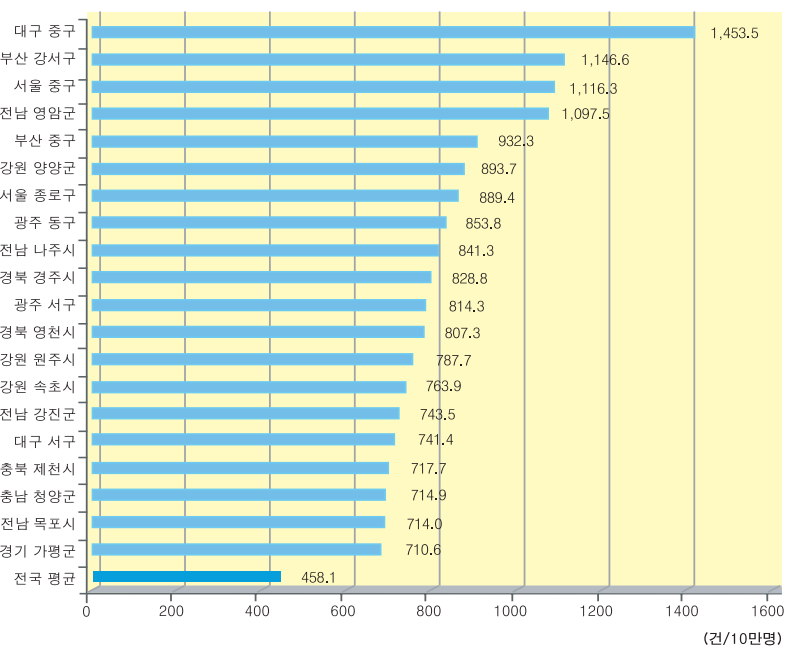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시·군·구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시·군·구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sup>8)</sup>.
- 대구 중구가 1,453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강서구와 서울 중구가 뒤를 이었음(전국 평균은 458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건 발생건수 다발 시·군·구 - 상위 20위



주 8)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2010

○일본 대지진 이후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1978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지진 횟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sup>9)</sup>.

- 최근 들어 지진의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대지진 및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방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내 지진 발생 통계

	5이상	5~4	4~3	3이하	총횟수
1978	2	2	1	1	6
1979		1	16	5	22
1980	1		5	10	16
1981		1	9	5	15
1982		3	8	2	13
1983		1	9	10	20
1984			7	12	19
1985		2	9	15	26
1986			12	3	15
1987		1	3	7	11
1988			4	2	6
1989			13	3	16
1990			3	12	15
1991			7	12	19
1992		3	4	8	15
1993		1	6	16	23
1994		4	7	14	25
1995		1	10	18	29
1996		2	12	25	39
1997		1	7	13	21
1998		1	6	25	32
1999		1	15	21	37
2000			8	21	29
2001		1	6	36	43
2002		1	10	38	49
2003	1	2	6	29	38
2004	1		5	36	42
2005		1	14	22	37
2006			7	43	50
2007		1	1	40	42
2008		1	3	23	27
2009		1	7	52	60
합계	5	33	245	593	876

주 9) 행정안전부, 2010 통계연보



# 5월 연구원 소식

## ▣ 지역 녹색성장 확산위한 컨퍼런스

- 일시: 2011. 5. 19(목) 13:30 ~ 7:30
- 장소: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주최: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CLEI 카본센터
- 참석: 한표환 원장(개회사)

## • 주요 프로그램

- 개최행사: 개회사, 환영사, 축사
- 세션 1: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 지방정부' 구현전략
- 세션 2: 지자체의 '지역 녹색공동체' 형성 방안

## ▣ KRIIA 교육연수

### 제2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교육

- 장소: 연구원 지하1층 강의실
- 일시: 5. 2(월) ~ 4(수)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제1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 장소: 연구원 지하1층 강의실
- 일시: 5. 11(수) ~ 13(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제2기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교육

- 장소: 연구원 지하1층 강의실
- 일시: 5. 18(수) ~ 20(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제2기 지역공공디자인 교육

- 장소: 연구원 지하1층 강의실
- 일시: 5. 25(수) ~ 27(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